

실시협약 논의 시작...한전공대 속도

전남도, 이번 주 첫 회의 전담TF팀도 구성 재정지원 등 올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 마련 내년 2월 인·허가 절차 마무리 하반기 착공

한전공대 실시협약 논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입지 제공 조건과 재정지원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다음달 중으로 실시협약이 마무리되면 전담조직 구성 등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전남도와 한전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에 한전공대 이행 협의를 위한 협약(일명 실시협약) 체결 첫 회의가 개최된다.

3월 중으로 실시협약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남도도 3개팀 17명으로 한전

공대 설립 지원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이달 안에 구성한다.

한전도 자체적인 TF를 꾸려 전남도와 협약체결에 나선다.

전남도와 한전은 협약내용이 완성될 때까지 수차례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실시협약에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재정지원을 포함해 부지·인프라·행정지원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재정지원금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영

암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한전공대 유치는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현안”이라며 “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를 설립해 지원하라는 만큼 일정부분 기여금을 부담하겠다. 재정지원을 통해 전남 전체가 한전공대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정지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재정지원에 앞서 나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시협약이 마무리되는 3월 중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최종부지로 선정된 부영CC의 부지 제공 범위와 조건도 관심사다.

부지 제공의 대가로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등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논란이 일 조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남도와 한전은 다음달 중으로 실시협약

이 마무리되면 최종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도는 실시협약 이후 TF를 정식조직인 가정 ‘한전공대 설립지원단’으로 출범시켜 한전공대 설립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7개 부처, 한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특별법이나 특별법 제·개정 등을 통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내년 2월 이전까지 학교법인 설립절차와 부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학생 1천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0333@srb.co.kr**

불친절 버스·택시 성과이윤 대폭 축소 광주시, 친절도 향상 고강도 혁신방안 추진

광주시가 불친절한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 성과이윤 배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1월10일 택시요금에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수준도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19세계수업선생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친절도 향상계획을 마련했다.

친절도 향상 기본방향은 시민들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과감히 확대한다.

친절도 상위와 하위 회사의 성과이윤 배분 격차를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등 페널티도 대폭 강화했다.

버스분야에서는 서비스평가에서 친절도 부문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항목을 새롭게 평가에 반영, 이를 통해 회사별 재정지원금을 차등지원한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각 운수회사가 스

로 노력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택시분야는 택시서비스 평가지표로 택시 불친절의 주요 원인인 택시종사자의 단기 알바식 고용형태를 근절시키고 실제 근무기간을 늘리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해외연수와 시장표창도 불친절 신고 누적횟수에 따라 개인별, 회사별로 제한한다.

현재 1일 37만여명(2017년 기준)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주요 민원은 승강장 통과, 승차거부, 불친절 등이다. 2016년 864건, 2017년 602건, 2018년 953건으로 하루 평균 2.6건이 접수되고 있다.

1일 33만여명(2016년 기준)이 이용하는 택시 불친절 민원은 2016년 907건, 2017년 852건, 2018년 1천483건으로 하루 평균 4건이 접수되고 있다.

송정역,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등 외지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에 화순 출신 안도걸씨 발탁

김대중 정부 이후 19년만



5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의 실무자 업무를 총괄할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에 전남 화순 출신 안도걸(54·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이 발탁됐다.

지난 22일 임명된 안 심의관은 고인이 된 임상규 전 순천대 총장이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예산총괄심의관 자리에 오른 뒤 19년만에 예산총괄심의관에 올랐다.

예산총괄심의관은 정부 부처 중 장·차관을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예산실장으로 승진이 관례처럼 돼있어 안 심의관의 예산실장 승진도 유력하다는 평가다.

호남 출신 예산실장은 3선 국회의원인 장병완 민주당평화당 의원(2004년~2005년)이 임명된 2005년이 마지막이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인 안 심의관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와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기재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예산심의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복지예산과장, 민간투자제도과장 등을 지낸 예산통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파견된 경력이 있으며 지난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다 복귀했다. **도철원기자 rep0333@srb.co.kr**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지난 22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채일병·양진석 대표회장, 황현택 시의회 산권위원장, 시민 등이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국방부에 촉구하고 있다. **오세원기자 dkoso@srb.co.kr**

“광주시민 염원 군공항 이전 서둘러야”

시민추진협, 창립·대정부 활동 ... 후보지 선정·보상대책 촉구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가 지난 22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창립총회 및 광주 군공항이전 추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채일병·양진석 대표회장, 이용섭 광주시장, 임항순 전국 호남 향우회 총연합회장 대표총재 등을 비롯해 시민 등 약 1천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조속한 선정과 국가사무원 군공항이전사업의 이전부지 지원 특별대책 강구,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

과제이며 150만 광주시민의 염원인 군 공항 이전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채일병·양진석 대표회장은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후보지지역을 조속히 선정하고 경제적보상과 문화적 인센티브 등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8월 광주와 전남도가 상생협약을 맺어 오는 2021년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합하고 광주 군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하는 등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무척 임과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가 도를 넘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자문위원회 및 기획운영위원회 등 8개 분과와 사무처로 구성됐다. 개별단체(350개), 시민사회연합단체(208개), 광주사랑방시민운동본부(116개), 시민 등 약 3만 5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광주 군공항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정부 촉구 활동과 시·도 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관람객 70만 돌파’ 전남 작은영화관 인기 전남도, 올해 4곳 등 내년까지 6곳 신설

지난해 전남 ‘작은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이 70만명을 돌파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작은 영화관은 지난 2015년 장흥 정남진시네마를 시작으로 고흥, 진도, 완도, 곡성, 화순 등 6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누적 관람객 수 71만5천명고 수익이 8억1천만을 달성했다.

고흥의 경우 순수익이 4억6천600만 원으로 지출액 대비 150%의 수익을 냈으며 장흥은 1억6천900만 원, 완도는 9천만 원, 진도는 6천500만 원, 화순은 2천600만 원이다.

특히 화순군은 순수익의 10%를 장학비에 기부하고 있다.

이처럼 작은영화관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최신 개봉영화를 보려고 먼 도시까지 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읍에서 관람하는 편의성이 있는데다 대도시 영화관보다 관람료도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도시권 영화관보다 40% 이상 저렴한 6천원이다.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1천원이 할인된 5천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전남도는 2019년 4개소, 2020년 2개소를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 16개소 중 13개소를 조성하게 된다. 아직까지 조성 계획이 없는 군은 영암, 장성, 함평 3개 군이다. **도철원기자 rep0333@srb.co.kr**

‘균형개발’ 도시계획 기준 마련 도,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제공

전남도가 ‘난개발 방지’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둔 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된 ‘전남도 용도지역 결정 검토·심의 기준’은 지역별 균형발전과 건강향 도시발전전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 확보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나지 않도록 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의 구체적 도시이용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적정 용도지역 결정 등이다.

전남도는 또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에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철원기자 rep0333@srb.co.kr**

www.seoyeong.ac.kr

“광주형 일자리, 행복한 동행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2018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경진대회 EV 부문 대상 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



2017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V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7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의 튜닝특성화대학 MOU체결

Dept. of Automotive Engineering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경진대회 전기자동차(EV) 부문 대상 수상(2018년)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바하(Baja) 부문 2회 종합우수 수상(2013년, 2016년)



서영대학교 자동차과

“나를 알아주는 대학, 꿈이 있는 대학, 미래가 즐거운 대학”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 대표전화 : (062)520-5114